

한·미 FTA, 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도전

글 | 이근영 _ 한겨레신문사 기자 kylee@hani.co.kr

지난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상에서 과학 기술과 관련해 타결된 부문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사 상호 인정, 원자력 에너지, 전략기술·물자 통제, 연구개발(R&D) 등 5개 분야다.

미국 기업 진출시 국내 사무소 설치 의무화

먼저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의 구체적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은 한국에 진출할 때 국내 사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2015년에 시장 규모가 1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는 유망 분야지만, 우리 나라는 미국의 60~70% 수준으로 수익성이 낮은 영세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개방 조치는 이들 업체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지법인 설립 의무(LP; Local Presence)를 미국이 받아들임으로써 이 부문의 협상은 '손해 보지 않은 장사'로 평가받고 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경부고속철·인천국제공항 등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사실상 우리의 필요에 따라 상당부분 개방돼 있었다. 국내 사무소 설립을 의무화함으로써, 현지법인 이 납부하는 법인세에 의한 직접적 이득뿐만 아니라 인력고용 등을 통한 경영 노하우의 전수 등 간접적 효과도 얻게 됐다.

과기부는 “엔지니어링 산업은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적자본이 다져진 우리 나라 여건에 적합한 핵심 산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주별로 진입 제한을 두고 있는 미국의 11개 주에 대해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 채널을 공식화한 것도 큰 협상 성과로 꼽힌다.

작업반 구성해 전문직 상호인정 추진하기로 합의

기술사 상호인정 분야에서도 우리쪽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는 전문직의 상호 인정 추진을 위한 실무자급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작업반은 한·미 FTA 협정 발효 직후 즉시 설치돼 1년 안에 논의를 시작하고, 2년 안에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술사 역시 우리 나라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분야다. 우리 나라 기술사 숫자는 2006년 현재 3만370명이다. 미국의 60만 명에 비하면 극히 열악한 인력과 시장 규모다. 미국 기술사들이 거대한 시장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동등한 경쟁을 할 경우 국내 기술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크다. 이런 점에서 기술사 분야가 곧바로 개방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에 총론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워킹 그룹에서 세부 사항을 다룰 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타결된 미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이 부분이 워킹 그룹 구성으로 합의를 이뤘는데, 이후 워킹 그룹의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 경우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동남아 등 세계시장에도 미국과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부는 보고 있다.

원자력에너지, 전략기술·물자 통제 분야는 개방 유보

FTA가 근본적으로 상거래 협정이라는 틀에서 보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나머지 협상들은 FTA 본질과 다소 떨어져 있는 주제들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 에너지와 전략 기술·물자 통제 분야는 향후



김종훈 수석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통합신당모임 한·미FTA 협상결과보고'에서 개성공단과 역외가공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추가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보하고, 미국쪽이 공공 분야를 제외한 연구개발 분야에 우리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쉽게 합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우리 나라는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때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개방을 담은 양허안을 제출했다. 아직 DDA가 타결되지 않았지만, 이번 한·미 FTA 협상은 이를 기본에 깔고 진행됐다. 당시 미국은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미국의 연구개발 시장 개방은 우리에게 FTA 협상을 통해 얻어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과기부는 “우리 나라의 미국내 첨단기술 구매, 국내 벤처기업의 미국내 연구소 설립이 용이해지면 기술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미국 등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대와 미국의 선진 벤처투자 기법 도입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가 활성화하고 미국 시장 연계를 통한 시장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은 내국인 대우(NT) 유보를 통해 상업적, 산업적, 의료용, 연구개발 활동 목적의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의 활동을 금지했다(현재 유보). 한마디로, 우리 기업의 미국 원자력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데 양자가 합의를 본 것이다. 반면 우리는 내국인 대우,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 차별 금지, 이행 요건

(예를 들어 일정량의 국산원료 사용) 등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유보했다(미래 유보). 미국은 현재 규제 조치만 유지할 수 있는 데 비해 우리는 미래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협상이라는 게 과기부 시각이다.

전략기술·물자 통제에서도 우리는 통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해 요구되는 허가와 관련해 내국인 대우에 관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미래 유보)하고, 미국은 내국인 대우 유보를 통해 수출관리 규정 대상의 상품, 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출과 재수출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허가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기술경영연구센터의 하태정 박사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당장은 중소기업체에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한·미 FTA의 과학기술 부문 타결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ST**



글쓴이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뒤 한겨레신문사에서 과학담당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석사)을 수료했다.